

공 개



의안번호	제 158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0. 4. 29. (제 8 차)	

(주)대구은행에 대한
부문검사 결과 조치안

금융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원장 은 성 수
제출 연월일	2020. 4. 29.

1. 의결주문

(주)대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<별지>와 같이 의결하며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재조치 대상자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<별지>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.

2. 제안이유

(주)대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,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함

3. 주요골자

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과 관련하여 (주)대구은행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

4. 참고사항

가. 금융감독원장이 안전상정을 요청한 사항임

나. 관계법규 : <붙임1>

-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33조, 제48조
-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」 제32조, 제36조, 제42조
-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」 제4조, 제10조
- 「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」 제20조, <별표3> 과태료 부과기준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) 제1항, 제17조(과태료의 부과) 제1항, 제18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
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3조(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) 제1항 내지 제3항, 제5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

다. 제재내용 공개안 : <붙임2>

라. 관계부서 협의

☐ 금융감독원 제5차 제재심의위원회(2020. 2. 25.) 심의필

<별지>

(주)대구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

- 다 음 -

1. 조치내용

가.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

□ 기관에 대한 조치 : 과태료(100백만원) 부과*

*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%를 감경

○ 법적 근거

-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33조, 제48조
-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」 제32조, 제36조, 제42조
-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」 제4조, 제10조
- 「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」 제20조, <별표3> 과태료 부과기준

2. 조치사유

가.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

□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33조(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)에 의하면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법정 사항*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도

* 가입자의 소득, 자산, 부채, 나이 등을 고려한 자산·부채관리 등에 관한 사항,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등

- (주)대구은행은 ××××.×.×.~××××.×.×. 기간 중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×,×××명에 대해 기한내에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

관 계 법 규

1. 퇴직연금 관련 법규

□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

제24조(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)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.

제33조(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)

① ~ ④ (생략)

⑤ 제24조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하여야 한다.

⑥ ~ ⑧ (생략)

제36조(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) ①~② (생략)

③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퇴직연금사업자를 감독하고, 퇴직연금사업자가 제33조를 위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주의, 그 임원에 대한 주의 또는 그 직원에 대한 주의·견책·감봉·정직·면직의 요구
2.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
3.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요구
4.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

④ 금융감독원장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고, 제33조제7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보고한 약관등이 이 법에 위배될 경우에는 변경·보완을 명할 수 있다.

제42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②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제48조(과태료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(생략)
 2. 제33조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
- ② ~ ③ (생략)

□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」

제17조(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한도)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"란 이전 사업에서 받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연간 1천800만원(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합계액)을 말한다.

제18조(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) ①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.

1. 연금: 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. 이 경우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.
2. 일시금: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

② 가입자가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.

제32조(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) ①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서 "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.

1.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
 - 가.~라. (생략)
 - 마. 연금소득세,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
 - 바. (생략)
 - 사. 가입자의 소득, 자산, 부채,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·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
2. (생략)
3.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
 - 가.~나. (생략)
 - 다.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
 - 라.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, 매도기준가,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

제36조(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) ① 법 제33조제5항에서 "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.

1. 법 제24조제2항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: 이 영 제17조, 제18조, 제32조제1항 제1호마목 및 사목,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41조(권한의 위탁·위임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위탁한다.

6. 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(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·징수로 한정한다)

⑧ 금융위원회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법 제3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조치(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는 제외한다)에 관한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.

제42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[별표 3]

과태료의 부과기준 (제42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가.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나.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·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

다.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
라.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
마.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실시하여야 할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	법 제48조제1항 제2호	1천만원

□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」

제4조(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) 영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

1. 영 제32조제1항제1호의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은 가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사내 정보통신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할 것. 다만, 제도 도입 후 최초 교육은 교육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원연수·조화·회의·강의 등 대면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2. 영 제32조제1항제2호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교육사항은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할 것
 - 가.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자료의 발송
 - 나. 직원연수·조화·회의·강의 등의 대면 교육의 실시
 - 다.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의 실시
 - 라. (생략)
3. 영 제32조제1항제3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교육사항은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할 것

제10조(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) 영 제36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다

2. 검사 및 제재 관련 법규

□ 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

제20조(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)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,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.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01.2.28, 2010.11.12, 2014.9.1, 2017.10.19>

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<별표 2>과징금 부과기준, <별표3>과태료 부과기준 및 <별표6>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. <개정 2014.9.1, 2017.10.19>

<별표3> 과태료부과기준(요약)

- 예정금액의 산정(2017.10.19. 이후) :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9단계로 구분

위반결과* \ 동기**	상	중	하
중대	법정최고금액의 100%	법정최고금액의 80%	법정최고금액의 60%
보통	법정최고금액의 80%	법정최고금액의 60%	법정최고금액의 40%
경미	법정최고금액의 60%	법정최고금액의 40%	법정최고금액의 20%

* 중대 : 사회·경제적 물의 야기, 금융기관·금융거래자의 손실초래,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
 보통 : 중대,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 경미 : 사회·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의 피해가 없는 경우 등

** 상 : 위반행위가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, 동기, 경위 등에 참작사유가 없는 경우
 중 : 위반행위가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, 동기, 경위 등에 참작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중과실에 의한 경우
 하 :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
□ 「금융기관점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」

- 제45조(직원에 대한 제재)** ② 감독원장은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(이사·감사 등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제1항에 따른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위법·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규정 제19조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. 다만, 이사·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(이하 “임원등”이라 한다. 이하 이조에서 같다)과 관련된 위법·부당행위로서 직원이 주된 행위자인 경우에는 임원등을 조치(함께 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한 후에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할 수 있다.
- ③ 감독원장은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대상자와 제재의 종류를 지정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 다만,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위법·부당행위를 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양정결과가 견책요구 이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.
2. 금융관련법규상 신용공여 금지위반 또는 한도초과 행위, 금융투자업자의 증권 임의매매·불공정거래행위, 보험회사의 특별이익제공·무자격모집위탁 등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한 행위

□ 질서위반행위규제법

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)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,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제17조(과태료의 부과)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(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.

제18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.

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.

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

제3조(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)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1. 당사자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과 주소
2. 과태료 부과에의 원인이 되는 사실,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
3.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
4.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
5.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
(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)

② 당사자는 제1항 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,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.

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.

제5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.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: (주)대구은행

2. 제재조치일 : 2020. 4. 29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 재 내 용
기관	과태료 100백만원 부과, 경영유의사항 2건, 개선 5건
직원	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

※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

(1)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

☐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33조(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)에 의하면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법정 사항*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도

* 가입자의 소득, 자산, 부채, 나이 등을 고려한 자산·부채관리 등에 관한 사항,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등

- (주)대구은행은 ××××.××.××.~××××.××.××. 기간 중 개인형퇴직연금 제도 가입자 ×,×××명에 대해 기한 내에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

< 관계법규 >

1.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33조, 제48조
2.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」 제32조, 제36조, 제42조
3.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」 제4조, 제10조

나. 경영유의사항

(1) 퇴직연금 내부통제기준 정비 필요

- (주)대구은행(이하 “회사”라 함)은 퇴직연금사업자로서 책무를 준수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해야 하는데도

퇴직연금 규정·지침에 개정된 법규 및 업무프로세스를 반영하지 않는 등* 내부 규정·지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으므로

* '14.XX월 이후 적용금리를 월 1회 결정하고 있으나 월 2회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(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상품 내부통제규정), 퇴직연금상품 선정업무가 '17.XX월 □□□□부로 이관되었으나 아직 ◇◇◇◇부서 업무로 규정되어 있음(퇴직연금지침)

실질적인 규율이 가능하도록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일괄 정비할 필요가 있음

(2)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부적정

- 회사는 가입자가 자산운용 방법 및 연금수령 여부 등을 선택함에 있어 최적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해야 하는데도

홈페이지에 운영하지 않는 추천펀드 및 추천포트폴리오*를 제시하고
운용상품 소개 화면에 일부 펀드의 총보수를 실제와 달리 안내하고
있으며 연금시물레이션에 잘못된 결과**를 제시하는 등 가입자의 합리
적인 판단을 저해하고 있으므로

* '17.XX월 홈페이지에 펀드 및 포트폴리오 추천화면을 구축하였으나 지속적
으로 관리하지 않아 검사일 현재까지 장기간 잘못된 정보를 제공

** 일시금과 연금의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연도를 다르게 설정하여 연금
수령이 실제보다 불리한 것으로 나타남

가입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의 상품 및 연금수령 여부
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터넷홈페이지의 운영 및 관리체계를 일제
정비할 필요가 있음

다. 개선사항

(1) 부담금 미납 통지업무 미흡

- 회사는 퇴직연금사업자로서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28조의 운용
관리계약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(이하 “DC”라 함) 및
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25조에 따라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
대한 특례로서 인정되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(이하 “기업형 IRP”라 함)의
사용자 부담금이 납입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에만 7일*
이내에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납내역을 통지해야 하는데도

*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('19.10.27)으로 현재는 10일 이내 통지

미납 발생일의 익월 15일경 미납내역을 일괄적으로 통지함에 따라
통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X,XXX건에 대해서도 통지하여 가입자에게
혼란*을 초래하였고

* (주)OOOOO는 통지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(납입예정일[’18.12.31.]로부터 1개월 이내인 ’19.1.25.에 납입) ’19.1.14.에 미리 통지

통지내용에 부담금 납입예정일 및 지연이자 부가 등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가입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으므로

정확한 기산일자에 납입예정일 및 지연이자의 부가사실 등이 포함된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

(2) 적립금 운용방법 제시 프로세스 미흡

- 회사는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으로서 가입자가 적립금을 퇴직연금의 특성에 부합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상품을 선정하여 제시해야 하는데도

신규상품 선정시 퇴직연금 운용상품으로서의 적합성 평가기준 및 퇴직연금 부서의 의견 수렴절차* 등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

* ’17.XX월 ◇◇◇◇부(♀♀♀♀ 부서)에서 □□□□부로 퇴직연금 신규상품 선정업무를 이관한 후 퇴직연금의 성격을 고려한 상품선정 기준 및 신탁연금부와의 협의절차 등을 마련하지 않음

수수료가 저렴한 온라인 전용상품(e클래스)을 전혀 제시하지 않아 가입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

가입자가 최적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상품선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다양한 클래스의 펀드를 제시하는 등 적립금 운용상품 제시 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

(3) 적립금 운용방법 및 투자한도기준 관리 미흡

- 회사는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으로서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및 관련 법규에 의한 운용방법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도

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」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위험자산 총투자한도는 관리하고 있으나, 동 한도 위반시 안내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통보 오류*가 발생한 사례가 있고

* DC 가입자 강**의 경우 '18.XX.XX~'19.XX.XX 기간중 정상통보 XX회, 미통보 XX회, 오류통보 XX회 등

「퇴직연금 감독규정」 제11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퇴직연금 제도별 동일 법인·동일 계열기업군 등에 대한 투자한도를 관리하지 않고 있으므로

가입자가 적립금을 법규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운용 방법 및 투자한도기준에 대한 내규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가입자에게 정확히 안내하는 등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

(4) 적립금 운용지시 안내업무 미흡

- 회사는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으로서 근로자의 퇴직연금 자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는데도

2019.XX월말 기준 DC 및 기업형·개인형 IRP 가입자 중 X,XXX명이 1백만원 이상의 적립금(총 XX,XXX백만원)을 3개월 이상 전액 대기성 자금으로 유지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으므로

적립금 납입 또는 운용상품 만기 이후 가입자가 운용지시의 공백 없이 효율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적립금 운용현황 및 운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통지하는 등 적립금 운용지시 안내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

(5) 재정검증업무 미흡

- 회사는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으로서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재정검증을 실시하고 적립금 부족시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하는데도

사용자가 제공한 가입자 명부의 정보에 대해 오류^{*}를 점검하지 않고 사용자가 제출한 값을 그대로 사용하여 재정검증을 실시하였으며

* (주)○○○○○ 소속 근로자 X명의 평균급여가 큰 폭으로 변동('15년 XXX만원 → '16년 XX만원 → '17년 XXX만원)하였음에도 오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재정검증 실시

재정적립 부족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립부족사실을 통지하기 위한 근로자 주소 정보 수집 노력을 하지 않는 등 통지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므로

재정검증 업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입수한 정보의 적정성을 검증하고, 근로자 주소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적립부족 사실이 근로자에게 통지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	금융감독원
소관부서	자산운용과	특수은행검사국
연 락 처	02-2100-2673	02-3145-7191